

코로나에 임금근로자 사상 첫 감소...743만 비정규직 더 가혹

비정규직 근로자 742만6000명...전년보다 5만5000명 ↓

정부 재정일자리로 한시 기간제 근로자 13.3만명 증가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 영향, 비기간제 31만명 줄어

작년 비정규직 급증 논란...”이미 반영돼 증감 안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근로자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더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044만6000명으로 전년(2055만9000명)보다 11만3000명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감소한 셈이다.

이 중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2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5000명(-0.7%) 쪼그라들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2만명(63.7%)으로 전년보다 5만8000명(-0.4%)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작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침체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되는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히 더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의 경우 한시적 근로자이자 기간제 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 중 한시적 근로자는 460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7000명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고용주 요구·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9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53.0%로 2.2%p 상승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의 재정일자리는 100% 기간제로

보면 되는데 올해는 정부 일자리 10만 명이 순증한 게 반영됐다"면서 "정부의 재정일자리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비기간제 근로자는 67만5000명으로 31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9.1%로 4.1%p 하락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 산업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고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며 평균 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8월 기간제 근로자는 32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전년보다 1.6%p 올랐다.

정 과장은 "기간제 근로자는 2005년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채 안 됐지만 2015년 이

후에는 40%까지 상승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부분, 정부일자리 사업의 증가 등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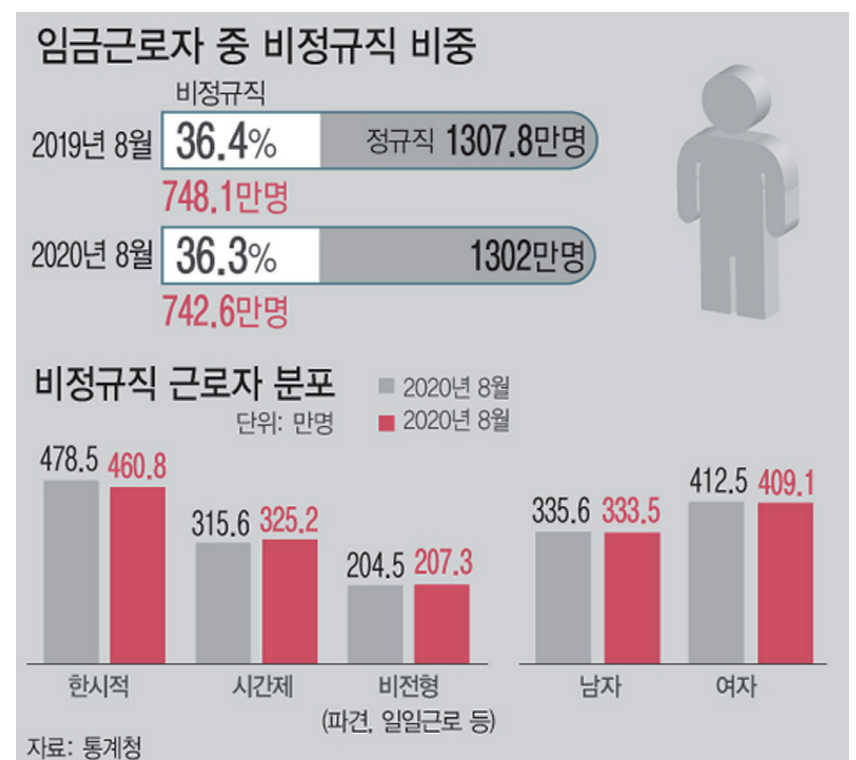
기간제 근로자 중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는 52.5%로 전년보다 3.9%p 하락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여성(1년11개월)이 남성(1년4개월)보다 7개월 길게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을 소문 18.8시간으로 남성(19.3시간)이 여성(18.6시간)보다 0.7시간 길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90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4000원 줄었다. 남성은 97만원, 여성은 87만7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3만4000원, 2만2000원 감소했다.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근로자는 1년 전보다 2만8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6.1%로 1년 전보다 1.7%p 상승했다. 2019년 기준으로 는 한국이 24.4%로 캐나다(12.8%), 독



일(12.0%), 네덜란드(20.3%), 폴란드(21.8%), 영국(5.2%)보다 높았으나 스페인(26.3%)보다는 낮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국제 총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실시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기준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병행조사와 부가조사를 모두 동일한 기준으

로 실시하면서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해졌다. '조사 방식 변경 효과' 이미 지난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규모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3·6·9·12월 병행조사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다시 원상대로 가게 됐다"며 "올해는 병행조사로 (기간제 근로자) 규모 자체는 반영됐으나, 증감은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음달 1일까지 10주년 할인 행사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모델들이 트레이더스 10주년 기념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26일(월)부터 11월 1일까지 신선, 가공, 가전 등 트레이더스 대표 인기상품을 비롯해 10주년 기념 기획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이마트 제공)

대기업, 계열사에 빌려준 돈 20% 감소해

“보증액 864억원뿐... ‘시장 준칙’으로 정착한 듯”

대기업이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지난해 보다 20.1% 줄어든 864억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안에 의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도 모두 사라졌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의 후폭풍을 키웠던 대기업의 '연대 보증'이 사라져가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내놓은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 보증 현황' 자료를 통해 "이들의 채무 보증액은 지난해 1081억원 대비 217억원(20.1%) 감소했다"면서 "기존 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 106억원은 해소됐고,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액도 여성상환·지정 제외 124억원으로 총 230

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 보증액을 2년 내 반드시 없애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채무 보증액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보고, 해소 의무를 두지 않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은 지난 1998년 금지됐다.

대성·태광·유진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2011년과 중흥건설 2015년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채무 보증액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016년 3212억원→2017년 2945억원→2018년 2678억원→2019년 1081억원→2020년 864억원으로 줄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게 만드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채무 보증 금지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올해 채무 보증액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농협·두산·GS·KCC 4곳이다.

지난해 채무 보증액 중에서는 230억원이 해소됐고, 13억원이 새로 생겼다.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 총 106억원을 보유한 카카오·HDC·SK 3곳은 이를 모두 해소했다. 농협은 계열사 '그랑몬스터'를 새로 편입하면서 신규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 7억원이 발생했다.

김민정 기자

올해 김장 10월말 33만→12월 29만...“늦게 할수록 싸”

4인 가구 21.9포기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



올해 김장비용(4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와 같은 30만원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이은 장마와 태풍 탓에 고공행진하던 배추값은 11~12월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김장 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 공급 안정화, 김장비용 부담 완화, 김장문화 확산 및 소비 촉진 등을 담은 '김장채소 공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1.9포기 수준으로 전년(22.3포기)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기준 4인 가구 김장비용은 30만원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 20포기를 담그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배추 9만원, 무 2만2000원, 고춧가루 6만2000원, 간마늘 1만2000원, 대파 6000원, 쪽파 1만1000원, 생강 1000원, 미나리 1만5000원, 갓 8000원, 굴 3만6000원, 젓갈 2만8000원, 소금 1만원 등으로 예측됐다.

김장은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7만5000t)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0t)을 공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방출하기로 했다.

김장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경기 북부지역부터 시작돼 12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근 김장채소 수급 여건을 보면, 가을배추 생산량은 초기 작황 부진과 안정세에 접어들어 김장 시기를 뒤로 미룰수록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가을무 역시 재배면적과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44만t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김장철 도매가격은 배추가 포기당 1900원, 무는 개당 11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장 양념채소류 중 고추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22% 감소하고 이에 따라 도매가격도 현재 시세인 600g 당 1만6000원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마늘은 생산량이 평년 대비 7% 증가하는 등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6만9000원(간마늘 기준)에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해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추는 미리 확보한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7만5000t)과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25000t)을 공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5000t을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방출해 공급량을 평소 대비 20%까지 늘린

다. 무도 김장 집중시기 출하량 부족에 대비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4만8000t을 확보해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평년보다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추는 정부 비축물량 5314t을 탄력적으로 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할인쿠폰 지원과 할인판매 등을 연계한 '농합김시다. 김장편' 행사를 추진한다.

김장채소류와 돼지고기의 경우 1만원 구입 시 2000원 할인해주는 방식의 쿠폰을 제공한다.

전국 농협 판매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 배추·무·마늘·고추 등 김장용 채소류를 시중가보다 2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는 20% 할인 김장 기획행사를 열고 공영홈쇼핑에서도 김치 특별판매전을 실시한다.

그밖에 주변 할인 판매장 등 정보를 직거래정보망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학교나 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도 김장채소 가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그밖에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12월 상순까지 특별 안전성 조사에도 돌입한다.

권제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와 무 가격이 안정되면서 김장철 김장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김장으로 가족·친지·이웃과도 넉넉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